일 잘하는 공무원 성과급 50% 더 준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인사혁신처 이달 입법 예고

업무성과 미흡하면 재교육…개선 안될 땐 퇴출 검토

앞으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파격적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일단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할 경우 현재 S등급을 받은 5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613만원인데 SS등급을 받으면 920만원을 받게 된다. 또 6급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이 527만원에서 791만원까지, 7급 공무원은 441만원에서 662만원까지 올라간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 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특히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면담 체계도 강화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8월 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며,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 개혁의 한 분야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초대 광주·전남통합연구원장 3명 압축

장관급 대우에 관심 집중

광주복지재단 대표도 주목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모중인 초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원장과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시·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중 규모나 기능면에서 대형급인데다 '초대'라는 상징성도 크게 때문이다. 특히 통합연구원장의 대우는 장관급이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9월 통합 출범하는 광주·전남연구원 초대원장에 7명 응모자 중 3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와 이선 전 국책연구원장, 신순호 목포대 교수(무순) 등 3명이 원장추천위원회의 최근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했다.

원장추천위는 5명으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다시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일 추천위를 열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시·도 임원추천위는 광주시, 전남도, 시·도의회, 이사회 2명씩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달 중순께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후보 1명을 결정한 뒤 시·도의회 공동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당연직 5명과 시·도 단체장이 추천한 선임직 이사 14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9월 출범을 앞둔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옛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초대 대표이사 공모에는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과 교수와 정용준 전 광주시의회 사무처장(무순) 등 2명이 응모해 모두 면접을 통과했다.

광주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된 광주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일 면접 심사를 통해 2명의 응모자를 적격 후보자로 모두 재단 이사회에 추천했다.

재단이사회는 조만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추천하면 재단이사장인 시장이 최종 후보자 1인을 내정한다.

광주복지재단은 기존 빛고을노인재단과 단독 출범이 추진됐던 복지재단을 통합한 것으로 노인문제는 물론 장애인 등 광주복지정책 수립 등 이른바 '광주형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초대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보수는 광주여성재단 대표 이사와 같은 수준(84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책위 부의장 김광진 제1정조위원장 임내현

새정치, 당직개편

김광진 의원 임내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을 임명했다.

또 정책위 부의장에는 순천 출신의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과 함께 박용진 전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제1정조위원장에는 광주 북을이 지역구인 둔 임내현 의원, 제2정조위원장에는 김관영 의원, 제3정조위원장에는 박민수 의원, 제4정조위원장에는 은수미 의원, 제5정조위원장에는 윤관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일본 재무장 규탄 퍼포먼스

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재무장 규탄·한미일군사동맹 반대를 위한 행동전'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마을의 행복 수준 얼마나 될까?…행자부, 행복지표 개발

정읍·하동·인천 부평 시범조사

이르면 연말부터 내가 사는 마을의 역사 관광자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수, 주민 체감 소득·복지만족도 등 행복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읍·면·동과 각 마을의 자원, 지역공동체 역량, 주민 삶의 질 현황을 담은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표는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도시·농촌·도농복합 지역별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성화지표'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건 공통지표다.

공통지표는 경제·교육·교통·문화 등 11개 분야 주민 삶의 질, 공동체 기반·과정·인력·성과 등 7개 분야의 공동체 역량, 자원 활용과 기반 등 2개 분야의 마을자원, 이렇게 총 3개 영역 88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행자부는 5월 업무협약을 한 전북 정읍시, 경남 하동군, 인천 부평구와 함께 10월까지 특성화지표도 개발하고 3개 지자체의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범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베 담화에 '사죄'는 없다

아사히신문 초안 내용 보도

전후 70년 기념 14일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밤 회동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간부들에게 보여준 담화 초안에는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전후 60년 담화인 고이즈미(小泉) 담화에 포함된 '사죄'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도 없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은 포함됐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문구는 명확하게 자리매김돼 있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 측은 "과거 담화를 되밟는다고 총리는 말하지만 사죄의 의미가 세계 각국에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사죄의 표현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또 "일본이 왜 반성을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며 침략이라는 표현을 제대로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알겠다"고만 답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7일 회동에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 등이 참석했고 아베 총리의 '복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배석했다. 자민당 간부는 담화와 관련한 공명당과 대면 협의는 7일 회동이 마지막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공명당 간부는 "아직 총리에게 일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만큼 공명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만장일치제인 각의 결정의 원칙상 공명당 소속 각료인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명당의 요구를 아베 총리가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담화의 최종 변수로 부상했다.

/연합뉴스